

현안으로 본 개발협력의 미래: 한국적 맥락을 중심으로

The Futur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Emerging
Issues: Focus on Korean Contexts

김철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개발협력 분야의 발전과 변화 경로를 살펴보고, 현황과 실태를 분석해 다양한 현안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개발협력은 경제, 사회, 정치, 보건, 젠더, 환경 등을 모두 아우르며, 이러한 분야와 상호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개발협력 분야의 현안은 개발협력의 체계화와 연계 강화,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 그리고 지속가능성 담보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개발협력의 의미와 역할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사업 추진 방식의 효율화 및 효과성 제고, 참여 주체의 다양화와 파트너십 강화, 민간협력 확대 및 지속성 보장, 자율 기반의 성과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사업 효과성 극대화, SDGs와의 연계 등을 제안하였다.

1. 들어가며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은 성장과 발전을 넘어 협력과 공생의 아이콘으로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공여국과 수원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류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고 공동의 생존과 번영을 함께 논의하는 플랫폼이 되었다. 최근 들어 인구, 기술, 기후변화, 불평등과 격차, 인권과 자유, 일자리, 삶의 질 등 개발협력과 관련한 환경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보편화되고 있는 개발협력이지만 개념과 정의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 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활동이며, 개발도상국 정부 및 지역 또는 국제

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196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출범 이후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국제협력, 경제협력, 개발협력, 공적원조, 공적개발금융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한편, 국제개발협력(ODC: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의 개발은 물론, 빈부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광의의 개념인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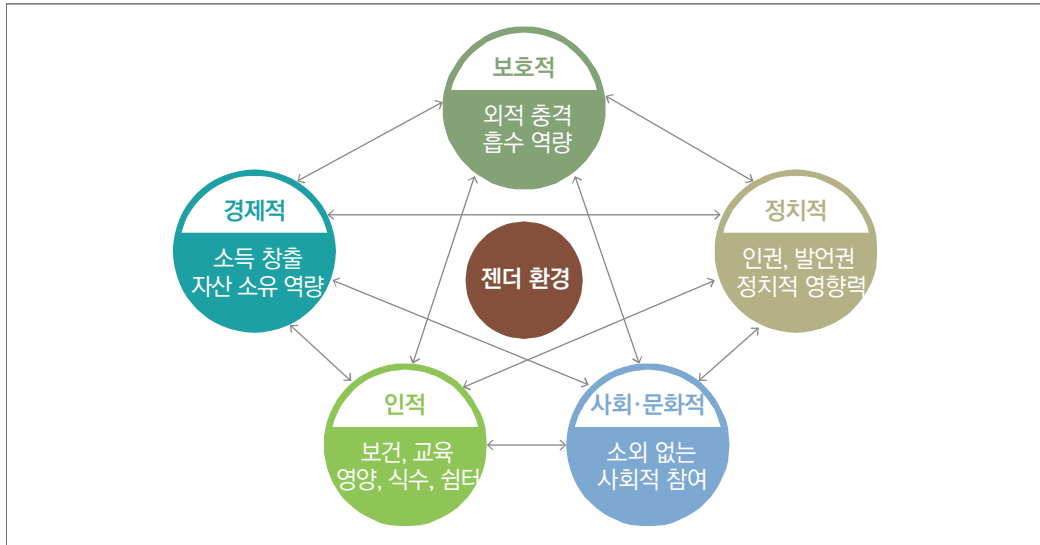
이 글은 개발협력 분야의 발전과 변화 경과를 살펴보고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당면한 다양한 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개발협력의 참모습을 그려보는 데 목적이 있다.

2. 개발협력의 발전 및 변화 경과

가. 개발협력의 발전

개발원조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보편적인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여국이나 기관에 따라서는 빈곤 감소 외에도 경제성장, 민주주의 확산, 평화와 안정 유지, 지속 가능한 개발과 같은 다양한 상위 목적을 가지고 개발협력 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가장 많은 공여국이 채택하고 있는 목적은 빈곤 감소이다. 빈곤 퇴치는 경제, 사회, 정치, 안보, 환경 측면 개발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목적들은 서로의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빈곤을 해결한다는 것은 인간의 경제적, 인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역량을 다차원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환경과 양성평등 요소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www.odakorea.go.kr). 이처럼 개발협력은 경제, 사회, 정치, 보건, 젠더, 환경 등을 모두 아우르며, 이러한 분야와 상호작용하며 직간접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림 1. OECD DAC의 빈곤 감소 가이드라인



자료: OECD. (2001). The DAC guideline on poverty reduction. www.odakorea.go.kr 재인용.

나. 역할·기능 변화

개발협력은 1960년대에는 국제사회에서 빈곤을 해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간주되었고, 1970년대에는 빈곤과 실업 감소라는 원조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다. 더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성장과 분배에 초점을 두고 지역 기반의 통합 농촌 개발 프로젝트 활성화 및 비정부기구(NGO) 역할 확대, 봉사자 증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에는 성장의 장애물 제거에 중점을 두고,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공공 부문 축소와 공공 개혁을 추진하였다. 1990년대에는 냉전 시대가 종결되면서, 경제적 원조를 넘어 정치적 차원의 원조가 강화되었다.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원조 효과에 대한 회의감, 환경 분야로의 자원 이동 등에 따라 원조 액수가 감소했으나 인도적 지원은 늘어났다. 이때부터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2000년대에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수립에 따라 절대빈곤 퇴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국제사회는 예산 지원 등 프로그램형 접근법과 비구속성 원조를 강화하였다. 2010년대에는 다시 원조가 무역, 투자, 송금 등 다른 자원과 함께 개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원조와 원조 그 이상(Aid and Beyond)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기후변화,

분쟁취약성, 공정무역 등 최근 부각되는 범지구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신흥 공여국 및 기업, 재단,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를 포함하는 민간개발자금의 비전통적 원조 주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원조체제에 대한 구상(www.odakorea.go.kr)도 진행 중이다.

한국은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ODA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개발협력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집행을 하고 있다. 그 이전에는 관심과 지원이 저조했고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높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여 요구도 크게 증가해 왔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협력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으며 사업 대상 지역, 국가, 사업 분야 등도 확대해 왔다. 특히 한국은 1960년대 개발연대 시대에 선진국으로부터 다양한 원조자금을 지원받아 경제성장의 기반을 이룬 특이한 역사가 있다. 한국의 성공적인 사례는 현재까지도 국제사회, 개발도상국 등에서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벤치마킹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간 관련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소규모, 인력 파견 등 직접적인 지원에 그쳤으나 지원 규모 확대에 따라 전략적인 사업 추진과 성과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사업성 위주에서 벗어나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방식을 도입하고, 지식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정책자문사업 등 한국적 특성과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기업의 글로벌 사회적 공헌의 일환으로 인도적 지원과 함께 수원국과 공여국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모형이 확대되어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3. 개발협력 현황

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2018년부터 측정 기준이 순지출에서 증여등가액으로 변경됨)는 1530억 달러이며, 경제 규모 대비 원조 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ODA/GNI) 평균은 0.31%이다. 한국의 ODA 규모는 양자 원조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달러 증가한 23억 5000만 달러로, OECD DAC 국가 중 15위(2017년 15위)를 기록했다. ODA 지원 실적 상위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순이다.

표 1. 한국의 ODA 잠정 통계(2017~2018년)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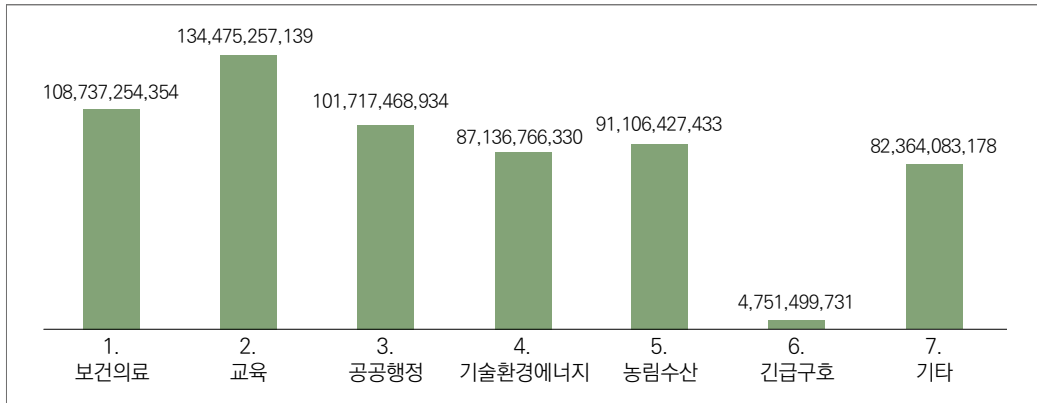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률	비율
ODA(A+B)	2,152	2,351	9.2	100.0
양자 간 ODA(A)	1,566	1,728	10.4	73.5
(무상 원조)	1,034	1,126	8.9	(65.2)
(유상 원조)	532	602	13.3	(34.8)
다자간 ODA(B)	586	623	6.2	26.5
ODA/GNI(%)	0.14	0.15	-	-

자료: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지원과. (2019.4.10.). '18년 우리나라 ODA는 23.5억불, DAC 국가 중 15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91166>에서 인출.

한국의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5%로 전년(0.14%) 대비 0.01%포인트 증가하여 소폭이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 ODA 지원 금액(2017년 기준)을 보면, 교육 분야의 가장 규모가 크고 이어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 기술환경 에너지,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도 그 비중이 매우 커 개발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사업 분야별 ODA 금액 분포(2017년 기준)



자료: 코이카 통계조회 서비스. stat.koica.go.kr

4.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분야 변화 동향

개발협력과 관련해서는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제1차 고위급회의(2002, 로마), 제2차 고위급회의(2005, 파리), 제3차 고위급회의(2008, 아크라), 제

4차 고위급회의(2011, 부산)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고 합의가 도출됐다. 즉,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해 주인 의식, 일치성, 조화(Harmonization), 성과 지향, 상호 책임성 등을 강조했으며 포괄적 파트너십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국제협약에 대한 이행이 중요하나 국가 간 협조 부족,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0~2015년) 종료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년)의 시작으로 개발협력과 관련한 새로운 인류 공동의 발전 목표가 설정되었으나 여전히 국제사회, 지역, 국가 간 협력과 연계가 어려워 이행체계와 연계·협력 시스템,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는 등 추진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주요 선진 공여국에서도 개발협력의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원조 규모 1위 국가인 미국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접근의 대외원조를 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특정 국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다. 미국에 이어 원조 규모 2위인 독일은 빈곤 감소라는 기초를 유지하고 있어 정책 일관성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2013년 이후 최근까지 난민 관련 지원을 포함한 기타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와 비중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다음으로 물에너지·교통, 교육 분야 순으로 비중이 높다. 특히 국제협력유한회사(GIZ)를 중심으로 특정 지역별 특정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어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의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은 유상과 무상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지출 또한 자유로운 편이다. 지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원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해 외교정책과 연계한 원조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KOICA, 2018, 재구성). 이상의 국가 대부분이 국익 증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현재 한국은 전문화, 특성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부처,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나 여전히 유·무상 원조가 구분되어 있어 부처(외교부, 기재부), 실행 기관(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더욱 효율적인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전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전문성을 보유한 다양한 부처, 기관 등의 주체가 활발하게 참여하여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5. 개발협력 관련 주요 이슈

이상의 개발협력과 관련한 발전 경과와 현황을 토대로 할 때, 개발협력 분야의 현안은 개발협력의 체계화와 연계·협력 강화,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 효율화, 지속가능성 담보 등이라 할 수 있다.

가. 개발협력 취지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

국제사회에서 빈곤 감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개발협력이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여 인간이 중심이 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이행해야 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 질적 전환을 하였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 이제 개발협력도 국제 및 국내 규범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제협력 전략과 어떻게 연계·협력 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더구나 개발협력은 산업, 기업, 고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있어 관련 부문의 효과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개발협력 관련 전달체계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기존 담당 부처에서 분야 전문성이 높은 관련 부처 및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어 원조 효과성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추진 방식의 효율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

대부분의 개발협력은 초기 단계에서 국가(정부), 하드웨어(시설·장비, 기자재 등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지역, 수원국 등에 대한 사업 여건 관련 정보가 쌓이면서 민간(시장, 국제 조달), 소프트웨어(지식, 경험, 교육·훈련, 자문 등), 수요 기반, 수원국 중심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기계적이고 정형화된 사업 추진 방식으로는 변화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 다자양자, 다양한 협력 방식(남남 협력, 삼각 협력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운영의 자율성 확보도 요구된다.

선진 공여국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우리나라도 지역, 분야,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분야별로는 교육, 복지를 포함한 보건 의료, 사업 추진 방식으로는 유무상 연계, 양자 중심, 프로그램 방식에 집중한다면 유효한 자원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참여 주체의 다양화와 파트너십 강화

다수의 선진 공여국에서 대학, 비정부기구(NGO) 등이 정부 혹은 재원 조달 주체로부터 위탁 받아 주도적으로 개발협력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공여국에서는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등 공공 영역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시간과 비용 등 규모의 경제와 정치·외교적 요소를 고려하여 국가 차원에서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경험, 사업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개발협력 컨설팅 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 분야, 내용,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참여 혹은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나아가 개별 사업들이 단위 사업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타 분야, 타 지역 등 타 영역과 연계·협력이 되지 않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교육-노동-복지 연계 혹은 통상(무역)-산업(중소기업) 연계, 지역 간, 국가 간 연계 등 다양한 수직·수평, 통합적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협력 분야의 다양한 정보가 충분히 생성, 가공, 축적,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선행되어야 한다.

라. 민관협력 확대 및 지속성 보장

민관협력(PPP)은 말 그대로 공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정부)와 기업(시장)이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격과 운영 방식, 성과 제고 등 많은 부분이 다른 영역과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두 부문 간의 위험을 분산·공유한다는 특징도 있다. 개발협력의 PPP에서는 부족한 개발 재원 확보, 글로벌 사회 공헌(Global CSR) 등도 포함하여 논의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기술이전, 고용, 생산성 향상 등을 촉진하여 빈곤 감소는 물론 경제발전과 개도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며, 2012년 출범한 개발협력연대(Development Alliance Korea) 등 새로운 개발협력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개발협력 관련 사업의 최대 목표는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계속 발전성을 확보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수원국의 자립 발전 의지와 함께 관련 프로그램과 개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공무원들은 물론 참여

주체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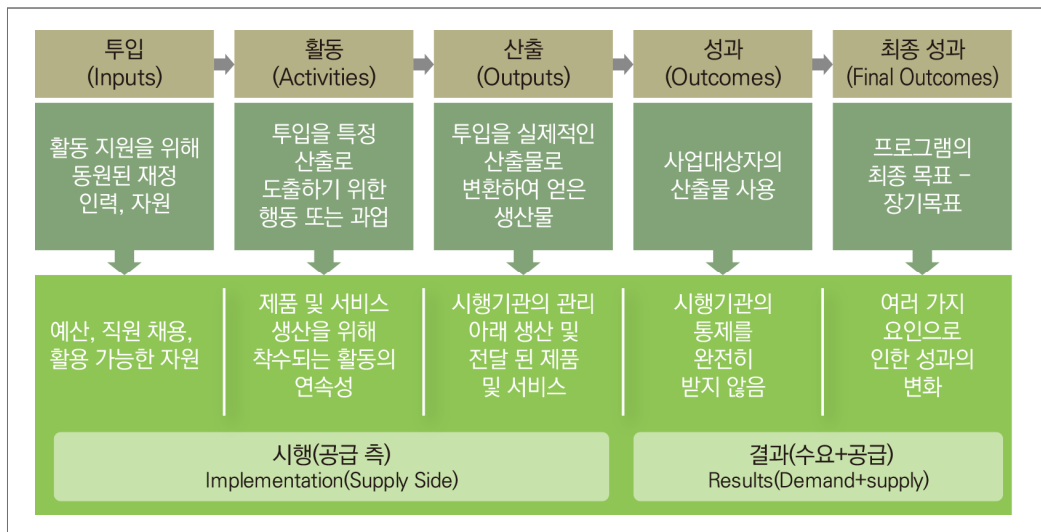
마. 자율 기반의 성과 관리

정부에서는 평가의 목적, 원칙, 종류 및 통합 평가 시스템 구조, 사업 수행 기관 평가(자체 평가) 절차 등을 담은 국제개발협력 통합 평가 매뉴얼(2018)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기계적인 작업이 아니라, 수원국의 정부·기관·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고 수용 가능하며 결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과 독립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성과 평가 시 논리 모형 접근법(Logical Framework Approach), 프로젝트 관리 모형(PBM: Project-Based Management)은 물론 영향 평가 모형(Impact Evaluation) 등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다. 이들 방법은 궁극적으로 이해관계자, 문제, 목표 등을 분석하여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대부분 투입, 활동, 산출, 성과 등의 절차별 목표와 세부 지표 선정을 통해 관리·집행되고 있다. PBM은 기획, 발굴, 심사, 승인, 평가, 결과의 환류 등의 순으로 추진된다.

많은 성과 평가 체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따라 수행되지만 세부 과정을

그림 3. 사업 성과 모형(Result chain)



자료: World Bank. (2011). Impact Evaluation in Practice.

보면 수원국, 지역, 대상, 사업 내용 등이 일치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론의 적절한 활용과 함께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성과 관리 방법을 적용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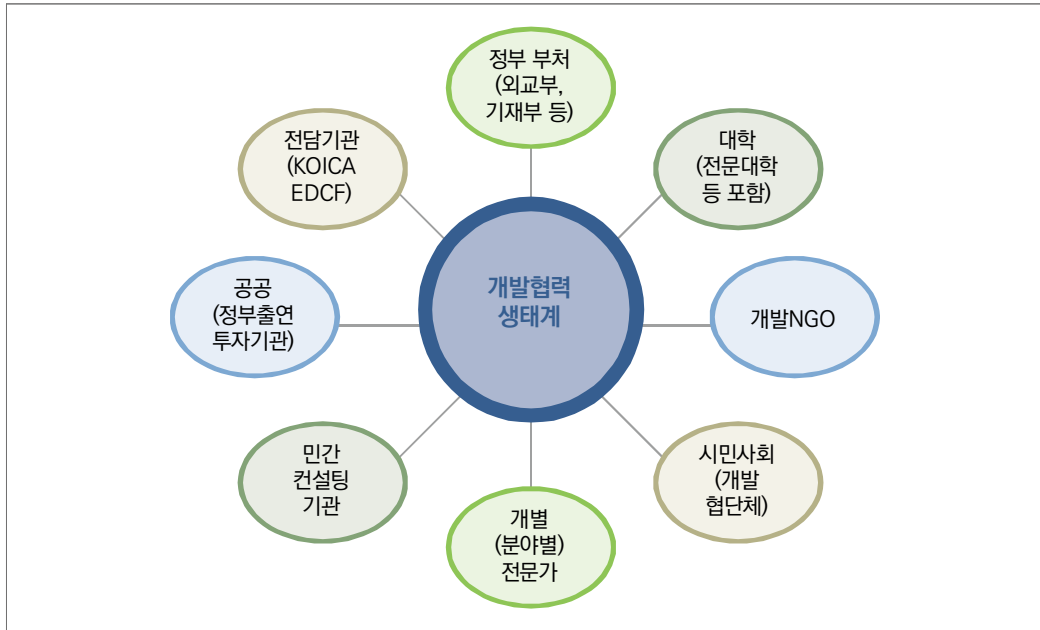
바. 전문 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사업 효과성 극대화

그간 개발협력 분야는 국내외의 관심과 지원 확대로 그 범위와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왔다. 또한 개발협력 현장에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상황 변화에 충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무 전문가 등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개발협력 분야가 양적·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관련 인재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활동하려면 개발협력 분야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즉, 개발협력 분야의 각 주체들이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이들 주체들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가치와 철학을 실행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선진 공여국은 오랜 개발협력 분야 사업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인력 양성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학교 교육 과정에 개발협력 교육 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분야별·직무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개발협력 분야 사업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봉사단, ODA 청년인턴 등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ODA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협력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협력 생태계는 전 세계, 전 인류와 이를 제어하는 각종 경제사회, 정책적 요인들이 종합된 복합체계이며, 개발협력을 수행하거나 수혜받는 주체 모두 상호 영향을 받는 종합체계라 할 수 있다. 이는 각 주체들 간의 연관 관계, 역할과 기능 등이 포함된 복합 구조이다.

정부 부처, 전담 기관, 공공 기관, 민간 컨설팅 기관, 분야별 전문가, 개발NGO를 포함한 시민사회, 대학(전문대학 등 포함) 등 개발협력 분야에서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 간 원활한 정보 공유, 의사소통 등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 비용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고성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림 4. 개발협력 생태계 영역과 구성 요소



자료: 김철희. (2018). 국내외 개발협력 인재양성 및 개발협력 생태계 육성방안 논의 현황. 국제개발협력, 2018 제3호, KOICA.

우리나라 개발협력 분야 인재 양성과 효과적인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개발협력의 범위 확대와 SDGs 연계, 중장기 관점에서의 시스템 설계 및 주요 의제로서의 인재 개발 추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 참여 및 수행, 개발협력 분야 인력 수급 전망(예측)을 연계한 사업 추진 구도 형성, 상생과 협력의 개발협력 생태계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의 연계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함으로써 인간이 중심이 되고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이행해야 하는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지향한다. 개발협력 분야는 SDGs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특히 유엔 SDGs와 연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K-SDGs(국가지속가능개발목표)의 개발협력 분야(목표 17, 파트너십)에서 총 19개 세부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어 개발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세부 지표로 ODA 순액 비율, 최빈국에 대한 지원 비율, ODA 및 남남 협력 비율, 협력 형태별 프로그램 수,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 비율 등이 담겨 있어 중요한 성과 측정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6. 결론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개발협력은 인도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점차 전략적, 경제사회적,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추진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즉, 관점과 대상 그리고 방향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개발협력은 글로벌 변화, 무역전쟁, 인종, 종교, 자원 등 다양한 국제 문제와 연계하여 이를 완화, 해소 혹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는 개발협력이 이제 수원국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사회·경제적인 매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SDGs 등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미래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은 짧은 기간 동안 양적·질적 발전과 개선을 지속하여 성과를 거둔 좋은 사례이다. 앞으로도 사업 방식의 다양화, 운영 방식 고도화, 수요 기반의 기획추진, 교육, 보건 등 주요 핵심 분야 중심의 선택과 집중형 사업 설계 등을 통해 개발협력의 성과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2018).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매뉴얼.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지원과. (2019.4.10.). '18년 우리나라 ODA는 23.5억불, DAC 국가 중 15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91166>에서 인출.
김철희. (2018). 국내외 개발협력 인제양성 및 개발협력 생태계 육성방안 논의 현황. 국제개발협력, 2018 제3호, KOICA.
김철희, 류기락, 박재성. (2017).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직업능력개발(TVET) 분야 추진전략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 www.odakorea.go.kr (최종접속: 2019.9.11.)
코이카 통계조회 서비스 웹사이트. stat.koica.go.kr (최종접속: 2019.9.11.)
KOICA. (2018). 주요 공여국의 원조 현황 및 실시체계.
OECD. (2001). The DAC guideline on poverty reduction. <http://oecd.org/development/povertyreduction/2672735.pdf>
World Bank. (2011). Impact Evaluation in Practice.